

# 개항 초기 서울지역 민중의 근대적 국민 의식 형성과정과 반일의식

조성윤

- |                                 |                    |
|---------------------------------|--------------------|
| I. 머리말                          | IV. 갑신정변과 그 이후의 변화 |
| II. 개항 직후 정부의 정책 전환과 민중의 반일의식   | V. 동포 개념의 확산과 반일의식 |
| III. 임오군란을 통해서 본 민중의식의 성장과 반일의식 | VI. 맺는말            |

## I.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한국 근대국가 형성기에 민중세력이 국가 권력을 어떻게 인식했고 자신들을 한 국가의 구성원, 즉 국민으로 어떻게 자각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조선을 중세국가로 볼 때 조선사회 구성원들은 자신들을 왕의 臣民으로 또는 왕의 百姓으로 인식했다. 양반 사대부들은 조선을 왕과 자신들을 포함한 하나의 국가로 파악하고 주인의식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었다. 조선의 백성들은 대부분 농민이었으며, 상인이고 수공업자였으며, 신분적으로는 상민이요, 노비였다. 그들이 볼 때 조선은 어디까지나 왕의 국가요, 양반들의 국가라고 생각했을 뿐, 자신들은 주인이 아니었다.

서양에서 등장한 근대 국가의 구성원을 우리는 흔히 시민이라고 개념화한다. 이들 시민들은 국가가 자신들의 것이라는 주인의식을 갖는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으로서의 자각과 주인의식은 프랑스혁명 과정에서 보듯이 왕궁을 공격하고, 왕을 단두대에서 처단하고, 귀족계급과 맞서 싸우면서 스스로 공화 정권을 수립하고, 나아가서는 외적이 공격

해 올 때 스스로 군대를 구성하여 맞서 싸우면서 형성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은 특정 직업이나 신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중세 권력과 맞서 싸우고, 자신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하면서 외세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집단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조선 사회는 서양과는 매우 다른 역사적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시민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 대신에 나는 왕조국가로부터 근대국가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배층의 권위에 묶여 순종만 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한 사람들을 ‘민중’으로 본다.<sup>1)</sup> 중세국가의 신민과 백성들 중에서 민중세력이 형성되고, 이들이 새로운 사회로 이행하는 중심축을 이루었다고 보는 것이다.

조선이라는 중세 왕조국가가 근대 국민국가로 전환되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못했다. 말하자면 중세국가 내부에서 개혁의 요구가 터져 나왔지만, 조선은 내부 개혁을 통해 근대국가로 전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부의 압력에 의해 강제로 개항을 하게 되었다. 당시 조선의 민중은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는 외세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동시에 외세에 한없이 무력하기만 한 조선 정부에 대한 실망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1876년 개항은 조선의 신민, 백성들에게는 커다란 위협이었지만, 동시에 짧은 시간 안에 중세 왕조국가의 신민과 백성의 위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가의 국민으로서 자신을 의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대외적인 위기가 발생하고,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사람들은 평소에는 별로 생각하지 않던 동류의식을 강화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야말로 오히려 이 위기가 구성원들을 묶어주고 국민적 자각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 글에서는 개항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국가의 정책을 비판하고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한 민중세력을 중심으로 근대적 국민의식의 형성 과정을 검토할 것이다. 나는 당시 자극을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받았고, 새로운 국민의식을 자각한 것이 바로 서울 지역의 민중들이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서울 지역이야말로 외국 외교사절과 외국의 군대가 가장 먼저 들어온 곳이고, 외국 상인들이 서로 먼저 들어와 상권을 차지하려고 경쟁을 벌이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서울은 왕실과 각종 권력기구가 자리 잡은 장소일 뿐만 아니라, 남녘과 북녘의 물산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유통의 중심지로서, 서울 지역 민중들은 국가 권력의 중심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살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 사회 내에서도 서울 지역

1) 민중의 개념은 다음을 참고 할 것. 정창렬, 1981 <백성의식, 평민의식, 민중의식> 《현상과인식》 5-4, 106

에 거주하는 주민들이야말로 가장 먼저 새로운 정치의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었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이 글에서는 우선 서울 지역 민중들의 국민의식의 자각이라는 문제를 외세와의 관련 속에서, 특히 일본에 대한 민중들의 인식을 통해서 정리하려고 한다.

이 글에서 다루는 시기는 1876년 개항 직후부터 임오군란을 거쳐서 갑신정변이 발생한 1884년까지다. 나는 우리가 개항 초기라고 부르는 이 시기에 발생한 주요 사건인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통해서 드러난 민중의 행동과 발언 등을 통해서 그들의 집권 세력에 대한 비판과 외세, 특히 일본에 대한 의식을 검토할 것이다.

## Ⅱ. 개항 직후 정부의 정책 전환과 민중의 반일의식

조선 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중화 체제 속에 안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서양 열강들과의 교류는 집권자들의 생각 속에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천주교는 물론이고, 이양선이 출몰하면서 전통적인 성리학 논리에 깊숙이 빠져 있던 조선 사회의 지식인들은 대부분 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이것은 일반 민중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눈에는 군함이란 곧 군사적 침략을 연상시키는 것이었다.

대원군의 쇄국정책은 이러한 양반 유생들과 민중들의 두려움을 대변하고 감싸주는 정책이었다. 물론 쇄국정책은 세계정세를 잘 몰랐기 때문에 가능했었고, 결코 장기적으로 가능한 정책도 아니었지만, 적어도 당시에는 양반 유생들과 민중의 커다란 호응을 받았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척화비로 상징되는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일단 저지되기는 했지만, 서구 열강에 대한 두려움과 적대감은 여전히 민중들 사이에 퍼져가고 있었다.<sup>2)</sup> 당시 민중들에게 서양인은 매우 낮설고 이질적인 존재였는데, 더구나 강한 무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을 두렵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었다. 그 보기로 1860년 영불 연합군이 북경을 침범해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조선의 양반 지식인들이 받았던 충격과 혼란이 얼마나 컸는지를 생각해 보면 될 것이다.<sup>3)</sup>

2) 윤진현, 1996 <대원군의 쇄국정책에 관한 연구> 《東亞論叢》 33 (동아대학교) ; 임재찬, 2001 <병인양요를 전후한 대원군의 군사정책> 《경북사학》 24 (경북사학회)

3) 배항섭, 1994(겨울) <개항기(1876~1894) 민중들의 일본에 대한 인식과 대응> 《역사비평》 27

이러한 두려움과 위기감이 널리 깔려 있는 상황에서 조선에 개항을 강요한 것은 서양 국가가 아닌 일본이었다. 1875년 8월 25일에 발생한 ‘운양호 사건’은 일본이 조선의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으킨 것이었다. 이 사건은 조선 민중이 일본이라는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일본 군함의 공격을 받자, 무력시위에 놀란 조선정부는 서둘러 일본과 불평등조약을 체결하였다. 대원군이 실각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이 사태는 양반 유생들은 물론 민중들에게도 충격이었다. 외세의 침입이 현실로 나타났고, 그것도 서구 열강이 아니라 일본이 당사자라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개항 이후 일본은 그들이 구미 각국과의 개국 교섭 과정에서 배운 그대로 조선과의 수호조약을 맺었으니 당연히 서로 공사를 상대방 수도에 머물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일본측은 일본 공사의 서울 상주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조선시대 내내 서울에 외국인이 상주한 적이 없었다. 중국의 사신들도 왕래만 했을 뿐 상주하지는 않았다. 때문에 조선정부는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결국 승인해 주고 말았다. 1880년 11월에 서대문 밖 淸水館에 공사관이 설치되고 공사의 서울 상주가 묵인되었다. 이때 공사관에는 일본 국기가 게양되었으며, 이곳에서는 공사 이외에 서기관·수행원·순사·통역관 등 40여명이 상주했다. 이 40여명의 일본인이 서울에 상주하고 서울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자, 그들이 지나 다니면서 성안이 시끄러워졌다고 하며, 일본 공사의 행차에 돌을 던지는 주민들까지 있어 물의를 빚기도 했다.<sup>4)</sup>

개항 이후 서울에 일본 공사관이 설치되고 일본 사람들이 마음대로 도성을 왕래하는 모습은 민중의 반일 정서를 확대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아직 막연한 형태이기는 했지만, 왜를 업신여기는 전통적인 감정과 왜구의 침략과 임진왜란을 겪으며 피해를 입었던 감정적인 상처, 운양호 사건으로 갖게 된 일본의 군사적 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일본으로부터의 상품 침투와 미곡 수출로 인한 물가 앙등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반 대중들 사이에 반일 감정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갔다.<sup>5)</sup>

(역사비평사)

4) 孫禎睦, 1982 《韓國開港期 都市變化過程研究》 (一志社) 169~176

5) 姜德相, 1962 <李氏朝鮮 開港直後における朝日貿易の展開> 《歷史學研究》 265 (歷史學研究會); 梶村秀樹, 1983 <李朝末期 綿業의 流通 및 生産構造> 《韓國近代經濟史研究》 (사계절); 吉野誠, 1975 <朝鮮開國後の穀物輸出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2 (朝鮮史研究會); 金敬泰, 1972 <對日不平等條約改正問題發生의 一前提 - 開港前期의 米穀問題에서본 外壓의 實態 -> 《梨大史苑》 10 (이화여자대학교 사학회); 金敬泰, 1994 <개항과 불평등조약 관계의 구조> 《한국근대경제사연구》 (창작과비평사)

이러한 민중들의 반일 감정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움직임이 위정척사파 유생들의 반일 상소와 의병 거사이다. 대표적인 위정척사론자로 꼽히는 崔益鉉은 倭洋一體論을 주장하면서 개항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으며, 이를 시작으로 유생들의 상소가 계속되었다. 개항은 조선 사회가 정치·경제적으로 반식민지로 전락하는 계기가 되며, 일본과의 조약은 곧이어 서구 제국과의 조약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과, 외국에의 문호 개방 정책을 중지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내정 개혁을 우선해야 된다는 점이 상소의 공통된 내용이었다. 유생 세력의 불만을 폭발시킬 절호의 기회가 된 것은 黃遵憲의 《私擬朝鮮策略》이라는 책자였다. ‘책략’을 표적으로 일어난 반대 운동은 1881년 3월 ‘영남 萬人疏’가 발단이 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는데, 공격의 화살은 처음에는 주로 개화파에게로 향하였으며, 공격이 격렬해지면서 점차 민씨 척족 정권도 공격 대상에 포함되었다. 정부는 유생 세력의 반대 상소운동을 전적으로 탄압책에 의해 통제하였으나 탄압책은 별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오히려 전국 유생들을 자극시켰다. 주요 상소자들이 처형되거나 유배당했지만 상소지는 속출하였고, 공격의 화살은 결국 국왕 고종과 일본인에게까지 향하게 되었다. 한편 개항 직후의 정치 사회 분위기 속에서 특히 양반 유생층 사이에는 상소보다도 직접적인 무려 사용을 통한 伐倭 방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일반화되고 있었으며, 유생 세력 지도자들이 이러한 일반적 인식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웠음은 짐작할 수 있다.<sup>6)</sup>

유생들의 활동은 대내적으로 사회개혁이라는 점에서는 지향하는 바가 달랐다 하더라도 반외세 특히 반일이라는 면에서 민중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민중들은 유생들의 움직임을 적극 지지하고 그들의 생각에 찬성함으로써 자신들의 태도를 표시하고 있었다. 특히 만민소 운동이 전개되던 당시 유생들은 민중들로부터 크게 지지를 받고 있었다. 송상도의 《騎驪隨筆》을 보면, 疏頭들이 감옥에 잡혀 들어갔을 때 형조의 서리·나장들은 영남 유생들과 홍재학 등 소유들을 극진히 대접하였으며, 홍재학이 형장으로 끌려가자 저자를 매운 서울 시민들이 수레를 따라가며 호곡했었다고 한다.<sup>7)</sup> 여기서 우리는 보수적인 양반 유생들과 일반 서울 하층 시민들이 신분적으로 크게 다른 집단이면서도 상호간에 강력한 연대감을 느끼고 있었음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연대감을 조선 역사 속에서 그리 찾기 쉬운 것이 아닐 것이다. 아마도 임진왜란 때 왜군

6) 조성윤, 1985 <개항 직후 대원군과의 쿠데타 시도-이재선 사건을 중심으로-> [楊尙弦 編, 《韓國近代政治史研究》 (도서출판 사계절)]

7) 宋相燾, 1971 《騎驪隨筆》 (國史編纂委員會) 8~14

江原道疏首洪在鶴/辛巳(高宗十八年)閏七月 七日

에 맞서 의병을 일으키고 협력했던 경험 이외에는 쉽게 만나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정부는 위정척사 상소와 유생들의 집단적인 항의 시위에 위축되지 않고 부국강병책을 추진해 나갔다. 이 시기의 개화사상은 우리의 전통 윤리와 도덕을 유지하면서 서양의 과학 기술을 받아들여 부국강병을 이루고자 하는 東道西器論의 입장이었다. 김옥균 박영효도 이 시기에는 동도서기론적 관점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시기에 들어와 백성을 교화한다는 뜻을 가진 개화라는 용어가 서구화 문명화의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해 점차 일반화 되어갔으며, 이른바 개화론자들의 개화에 대한 자각이 싹트기 시작했다.<sup>8)</sup>

민씨 척족 정권이 개화정책의 일환으로 군제 개혁을 추진했는데, 군제 개혁은 구식 군대를 도태시키고 일본식 군사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1881년에 종래의 훈련도감을 비롯한 각 군영을 武衛營과 壯禦營의 2군영으로 축소 개편하고, 신식 군대인 敎鍊兵隊(일명 別技軍)를 창설하면서 사관후보생의 양성도 추진하였다. 통리기무아문의 군무사 민겸호는 일본 공사 하나부사(花房義質)의 서신 내용을 전달하면서 일본의 육군 소위 호리모토(堀本禮造)를 훈련 교사로 삼아 군대를 훈련시킬 것을 요청했다.<sup>9)</sup> 5월에 정부는 군사 선발과 훈련에 관한 절목을 마련했으며, 군무사 敎鍊局 관장 아래 교련병대에 대한 신식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교련병대의 군병은 京五營의 지원자 중에서 80명을 선발했으며, 이후 계속 인원을 보충하여 사관생도 140여 명과 병졸 300여 명을 훈련시켰다.<sup>10)</sup> 호리모토의 지휘 아래 현대식 소총과 洋槍으로 무장시키고 신식 훈련을 실시하였다. 구식 군영 군병들이 실직 당하고 급료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교련 병대는 급료 지급은 물론 의복 등 여러 면에서 좋은 대우를 받았다. 이 때문에 하급 군병들은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밀려나가는 자들이 되고 말았으며, 앞으로 실직, 도태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여기에 다른 도시 하층민들과 함께 소비자층으로서, 그리고 상업, 수공업 종사자로서 피해를 당하고 있었던 측면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하급 군병들은 양 측면으로부터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집단이 되었던 것이다.

서양인들이 아닌 일본인들이 들어와 도성 안에 자리 잡고, 군사훈련을 시키는 것은

8) 주진오, 2004 <19세기 후반 文明開化論의 형성과 전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서구문화의 수용과 근대개혁> (태학사)]

9) 연갑수, 1993 <개항기 권력집단의 정세인식과 정책> <<1894년 농민전쟁연구 3>> (역사비평사)

10) 崔炳鈺, 2000 <<開化期の 軍事政策 研究>> (경인문화사)

다양한 소문을 낳고 있었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 대상이 되었다. 때문에 모화관에서 훈련을 받던 별기군이 시민들의 조롱과 욕설이 심해 견디다 못해 교련장을 북문 밖의 평습으로, 다시 하도감으로 계속해서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심지어는 보부상 수천 명이 교련소장을 공격하여 모두 죽일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었다.<sup>11)</sup> 이를 통해 우리는 민중들 사이에 현 정권 담당세력들과 이들이 끌어 들인 일본 세력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Ⅲ. 임오군란을 통해서 본 민중의식의 성장과 반일의식

1882년 서울에서 훈련도감 하급 군병들이 중심이 되어 발생한 임오군란은 개항 직후부터 계속해서 발생해오던 반일 상소운동과 1881년 미수에 그친 대원군과의 쿠데타 계획에서 구상하던 ‘伐倭’를 가장 극적으로 실천한 민중운동이었다. 특히 민중들의 힘에 의해서 민씨 척족정권이 무너지고 대원군 2차정권이 성립되었다는 사실은 한말의 사회 변동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민중을 기반으로 대원군 정권이 들어섬으로써 이들의 사회 변혁의 요구가 정당성을 획득하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실현될 기회를 얻은 것이다. 대원군의 2차 정권은 6월 10일부터 청군에 의해 납치당한 7월 13일까지 33일간 계속되었는데, 대원군 정권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군병들의 실질적인 힘의 장악과 도시 하층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기반 때문이었다.<sup>12)</sup>

한편 임오군란은 개항 이후 민중의 반일의식이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형태로 드러났던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그것은 서울에 상주하던 일본인들이 살해당하고 일본공사관이 불타는 형태로 나타났다. 하급 군병들이 평소 어떤 불만을 갖고 있었는지는 사태가 커지면서 그들이 움직인 방향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들은 먼저 훈련병대, 즉 별기군을 공격했다. 군병들은 별기군이 신식훈련을 받던 교련장소인 下都監으로 몰려가 領官 鄭龍燮을 죽이고 洋槍을 모두 부숴 버리는 한편, 그곳에 숙소를 두고 생활하던 일본인 교련관 육군 소위 호리모토를 쫓아가 죽였다. 또 이들은 남대문 근처 노상에서 육군어학

11) 《備邊司謄錄》 고종 17년 11월 13일 ; 金正明 編, 《日韓外交資料集成》 7卷, 138~139

12) 조성윤, 1999 <임오군란> 《한국사》 38 (국사편찬위원회)

생, 사비유학생 등 3명과 이들을 구하려 달려온 일본 공사관 外務巡査 3명도 모두 거리에서 민중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이어서 일본 공사관인 청수관을 습격하였다. 서대문 근처의 주민들은 군병들이 일본 공사관 공격을 시작하자, 몰려들어 합세하거나 구경하였다. 아마도 합세한 사람들보다는 구경꾼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일본 공사관원들은 총을 갖고 있었고 간간히 위협사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관에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중에 고안한 것이 방화였다. 공사관 옆집에 불을 놓아, 이 불이 공사관으로 옮겨 붙도록 했는데, 이 작전이 성공해서 공사관은 불길에 휩싸였다.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온 공사관원 일행은 인천으로 도망을 갔는데, 군병들은 일행을 계속 뒤쫓았고, 인천에서도 공격했다. 격렬한 싸움 끝에 일본인들은 6명이 죽고 5명이 부상을 당한 채 도망하다가 마침 정박 중이던 영국 선박에 구조되어 일본으로 떠났다. 이것만 보면 임오군란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한다.

서울 지역 민중들에게 일본인들이 가장 중요한 증오의 대상은 아니었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정책 담당자들이었고, 왕실이었다. 민씨 척족 정권은 부패한 정권이었다. 그들이 어떤 정책을 펴는가에 따라서 민중의 살림살이가 달라지므로 무능한 왕실과 정부에 대한 비판의식이 가장 강렬했다.

군병들의 시위가 본격화된 6월 9일 시위대를 포도청과 의금부의 옥문을 깨뜨리고 죄수들을 풀어놓았다. 그리고는 江華留守 閔台鎬를 비롯한 민씨 척족 정권의 중요 인물들과 개화파 관료들의 집을 차례로 습격, 파괴하는 한편, 서울 근교에 있는 중요 사찰을 부수고 불 지르는 행동을 밤늦게까지 계속했다. 10일에는 興仁君 李最應의 집을 습격, 살해하고, 노상에서 閔昌植을 살해한 뒤, 곧 창덕궁 돈의문으로 몰려갔다. 대궐 안으로 쏟아져 들어간 반란 군민들은 민겸호, 李憲 등의 대신과 李敏禮를 비롯한 많은 내시들을 죽였다. 김보현은 대궐로 급히 들어오다가 죽었다. 민비는 대궐 밖으로 피해서 숨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대원군 정권이 수립되었다. 정권 교체 이후에는 그들 스스로 서울의 치안을 담당하면서 새로 들어선 정권을 지켰는데, 이런 상태가 대원군이 청군에 의해 납치당할 때까지 약 한 달 동안 계속되었다. 그 동안 군병들은 서울 치안을 장악한 채 민씨 관련인물과 개화파의 색출작업을 폈는데, “군병들이 貞洞으로 가서 이미 살해된 민씨 척족 대신 閔致庠의 집을 부수고, 倭別技에 소속된 자 또는 나라에 유명한 무당과 巫覡의 집 등을 부수지 않음이 없었으며” 중인 부호가를 70여 채나 부수는 등의 행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런 군벌을 중심으로 한 민중들의 공격 행동을 정리해 보면, ①민씨 척족 관련 인물, ②유명한 무당, 서울 근교의 중요 사찰, ③개화파, 일본과 친한 자들, 왜벌기에 소속된 자들, ④中人 부호가 70여 채가 될 것이다.

민중들의 공격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일차적인 공격 대상은 실정을 거둬하고 있던 민씨 척족 정권의 관료들이었고, 다음 공격 대상은 이들과 손잡고 일본 세력을 끌어들이고 있는 개화파였고, 그리고 일본인 자신이 공격 대상이 되고 있었다.

물론 여기에 민비와 관련이 있던 무당과 사찰, 그리고 부를 축적하던 중인 부호들도 포함되었다. 실제로 민씨 척족세력과 개화파, 그리고 중인 부호들은 서로가 밀접히 연결되어 정치적·경제적 지배층으로 군림하면서 일본 세력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사찰과 巫覡은 궁중 부패의 대표적 상징이었다.

그들은 부패한 민씨 척족정권에 대해서 강한 불만과 적개심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민을 위한 공정한 정치를 펴지 않고, 개인들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었다.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있었고, 소수 권력자들의 집에서는 금은보화가 넘쳐나는 상태였다. 민중들이 보기에는 오랫동안 안동 김씨 정권이 권력을 독점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다가 잠시 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수탈이 억제되는 듯 했는데, 고종 친정체제가 되자, 이번에는 민씨 일족들이 저마다 중요 핵심 관직을 독차지하고 재산을 불리는 데 여념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게다가 고종을 좌지우지하는 민비가 세자를 위해 빌어달라고 무당을 시켜서 굿을 하고, 여러 절에다 시주하고, 금강산 일만 이천 봉에 비단을 하사하고 빈다든가, 무당 진령군을 철석같이 믿고 그를 의지하고, 관우를 모시는 사당인 복묘를 세운다든가 하는 것들 모두 비난받을 짓이었다.<sup>13)</sup> 그런 민비가 공격의 대상이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민중들에게는 더 이상 왕후에 대한 존경심은 없었다. 물론 왕궁을 습격하고 민비를 살해하려는 행동을 대원군이 지시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점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이미 민중들이 민비를 죽일 수 있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민씨 척족 세력과 함께 크게 피해를 입은 다른 집단은 개화파였다. “일본인에게 친한 자와 개화에 뜻을 두었다 알려진 자들을 체포하고, 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다”<sup>14)</sup> 개화파, 일본과 친한 자들, 왜벌기에 소속된 자들 모두가 공격 대상이었고, 특히 일본을 끌어들이는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던 사람들이 우선이었다.

운동을 통해 표현된 도시 하층민들의 요구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본 세력을 끌

13) 黃玿, 《梅泉野錄卷之一》 上 甲午以前.

14) 金正明 編, <梅津中尉聽取朴永圭情報> 《日韓外交資料集成》 7

어들이는 정치적, 경제적 지배층과 일본을 비롯한 외세를 공격, 제거함으로써 자신들에게 닥쳐오는 위협을 제거하고 사회 제도를 개혁하려는 것이었다. 이의 실현을 위해 그들은 새로운 정권 담당자로 대원군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러나 도시 하층민들의 요구가 이처럼 봉건적 사회 체제를 공격, 붕괴시키려는 측면을 강하게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 체제를 이념의 차원에서까지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극복하려는 변혁 운동으로는 바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 IV. 갑신정변과 그 이후의 변화

임오군란이 외세의 개입에 의해 진압 당했을 때, 민중들의 실망은 무척 컸을 것이다. 특히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던 노력이 외세에 의해 좌절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경험을 한 셈이었다. 그 이후 일본 공사관이 자리를 옮겨 다시 세워지고, 이번에는 일본군대가 성 안에까지 주둔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물론 임오군란은 진압한 청군 2천 명도 여전히 하도감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일본 상인과 청국 상인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서울 거리로 진출하고 있었다. 조선 민중들에게 청국과 일본 상인들이 들어오고, 청군과 일본군이 동시에 서울에 주둔하는 상황은 처음 맞이하는 사태였다. 민중들은 불안감을 안고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다. 게다가 민중들이 바라는 사회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전보다도 더 활발하게 개화과가 등용되고 있었다. 심지어는 김옥균이 울릉도를 일본에게 팔아먹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sup>15)</sup> 이 때문에 민중들은 일본세력을 끌어들이는 개화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점점 더 강하게 품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갑신정변 당시 정변에 대한 서울 민중들의 태도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sup>16)</sup> 당시 민중들은 주로 소문을 통해서 갑신정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민중들은 갑신정변을 ‘난당’, 즉 개화당과 일본인이 일으킨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변 다음 날인 10월 18일 오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서성대고 있었다고 한다. 이때의 시내 중심가 상황을 윤치호는 “도로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막혀 있었으며, 사람들의 어깨다 서로 맞닿아 있어 가마와 말이 지나가기 어려웠

15) 黃玿, 《梅泉野錄卷之一》 上 甲午以前

16) 이에 관해서는 박은숙의 연구가 유일하다. 박은숙, 2005 <민중의 갑신정변 인식과 적대적 대응> 《갑신정변연구》 (역사비평사)

다”<sup>17)</sup>고 적었다. 19일에는 정변을 둘러싼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었는데, 일본군이 증원되어 온다는 것과 왕실이 폐립되었다는 풍문이 있었으며, 왕비는 이미 죽었고, 왕의 존망을 알 수 없다는 매우 위태롭고 충격적인 소문이었다. 이 날도 윤치호는 “당시에 인민들이 시끄럽게 소요를 일으키며 길을 메우고 있었는데,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였다.<sup>18)</sup> 윤치호가 경험했듯이, 서울 민중들은 갑신정변의 사태 추이를 알고 싶어 했고,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와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었다

당시의 사정을 다음의 두 자료를 통해 보도록 하자.

A. 나는 ‘김옥균의 난’이 일어난 이래 바쁘게 움직였으나, 왕이 계동궁에서 대궐로 환궁한 이후로는 박영효와 거의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고, 거사가 성공할 수 있다는 처음에 가졌던 희망을 포기했다. 청국 군대가 왕궁에 침입했을 바로 그 때 나는 저동의 집에 있었다. 나는 청국군이 왕궁을 침입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마이즈미 히데타로(今泉秀太郎)와 후쿠시마 하루히데(福島春秀)와 함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성안의 소요 상황을 정확하게 접할 수 없었다. 이미 수많은 일본인이 폭도들에 의하여 살해당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즉시 우리 세 사람은 각각 칼을 가지고 집을 나와 일본 공사관으로 향했다. 도중에 여러 차례 청국인과 조선인들을 맞이하여 싸우다가 결국 후쿠시마는 창을 맞았고, 아마이즈미도 배에 돌을 맞았다. 우리 세 사람이 더 큰 봉변을 피해 간신히 공사관에 도착한 것은 오후 6시가 되어서였다. (井上角五郎, 1891 『漢城之殘夢』 東京春陽書樓(한상일 역, 1993 『한성지란몽』 (건국대출판부))

B. 군병들은 청군과 일본군이 교전할 때 청군을 따라 싸웠고, 일본군이 철수하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고종 주위에 있던 개화파 인물 홍영식과 박영교를 끌어내 죽이면서 모두 다같이 만세를 외쳤다. ... 개화파를 모두 진압하고 나자 도성민들은 환호를 지르며 기뻐했다. 도성민들은 개화당의 정변에 분노하여 만나기만 하면 잡아 죽였으며, 때를 지어 몰려가서 일본 공사관을 불태우고 일본인 관리를 죽였다.

(黃玹 <梅泉野錄卷之一> 上 甲午認前)

이러한 기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정변을 일으킨 개화파 세력은 일본군의 호위를 받고 있었다. 청군이 왕궁으로 쳐들어가 교전을 벌인 끝에 일본군은 패했고, 개화파 세력 가운데 일부는 일본군과 함께 도망치고, 일부는 청군의 칼에 죽었다. 이 때 주목할 것은 조선군이다. 임오군란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조선군이 청군과 함께 일본군을 공격하였고, 개화파 세력을 색출하여 죽이는 데 다시 나섰던 것이다. 그리고 시내 곳곳에서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 민중들의 공격이 벌어지고 있었다. 우리는 이노우에의 자료에서 이 점을 잘 읽을 수 있다. 민중들은 창을 들거나 돌을 들고 일본인

17) 윤치호, <윤치호일기> 1884.10.18(양력 12월 5일), “時道路充塞 人肩相接 轎馬難通 歸館之路”

18) 윤치호, <윤치호일기> 1884.10.19(양력 12월 6일), “當是時 人民喧擾道路 不可記錄”

에게 찌르고 던졌으며, 일본인들은 칼을 휘두르면서 맞았다. 결국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일본인들은 공사관으로 집결했다가, 공사관이 불타면서 인천으로 피해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 2년 전 임오군란 때와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진 것이다.

이러한 민중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물론 갑신정변이 개화파의 개혁운동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개화파의 노선은 민중들이 요구하던 개혁노선과는 다른 것이었음을 읽을 수 있다. 개화파는 처음부터 민중에 대해 불신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민중들과의 협력에는 어떤 생각도 없었다. 반면 민중들은 개화파가 나라를 일본에게 팔아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다가 이들이 일본군과 협력하여 왕궁을 점령하자 자신들의 판단이 틀림없다고 확신하게 되었을 것이다. 민중들의 태도는 이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거치면서 정부는 일본과 청국에게 더욱 많은 통상권을 부여하게 되었는데, 특히 최대의 시장인 서울이 외국 상인들의 침투에 개방되자, 영세소상인들은 물론 대규모 특권상인들의 상업 활동까지 크게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일본과 청국의 상인들은 자국 공사관 및 군대의 비호 속에 사대문 안과 용산 지역에 상점을 설치하거나 노점 활동을 통해 상권을 넓혀나가고 있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이들 세력이 퍼져나가 송도·수원·천안 등 중요 도시에도 수십 명씩 진출하고 있었고, 전국 각지를 왕래하며 상행위를 하였다. 청국 상인들은 전국 각지의 장시를 파고들고 있었기 때문에 보부상과 잦은 충돌을 일으키곤 하였다.

이 시기의 일본 상인과 청국 상인의 진출에 대한 조선인의 저항을 검토한 한우근은 “조선인의 청국인에 대한 반발은 흔히들 그들이 무역하는 물화의 劫掠과 방화로 나타남에 대조적으로 일본상인 내지 일본인에 대해서는 투석·구타·살상 등 인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청인과의 사단이 주로 중부 이북 지방에서 볼 수 있음에 대하여 일상과의 사단은 거의 국내 전역이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추세는 정확한 것은 될 수 없으나, 대체로 일본인의 침투 세력이 더욱 광범했던 것을 말하는 동시에 이들에 대한 반발이 더욱 격렬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sup>19)</sup>

1889년 서울에서는 일본을 비롯한 외국 상인들을 배척하는 투쟁이 일어났다. 서울 상인들은 외국 상인을 서울에서 철수시킬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이에 정부는 청국·일본 등과 교섭을 벌였는데, 교섭과정에서 일본이 서울 철수의 대가로 용산을 조계지로 달라는 요구를 해오자, 상인들은 이를 반대하여 상점 문을 닫고 철시투쟁을 단행하였다.

19) 韓沽昉, 1970 《韓國開港期の 商業研究》 (一潮閣) 119

1891년 5월에는 서울 어물 상인들이 일본 상인들의 어물 상업 행위를 금지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였다. 두 경우 모두 정부가 외세에 굴종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요구 조건을 관철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외세의 침략에 반대하는 상인들의 집단적 투쟁을 전개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주었다.<sup>20)</sup>

한편 미국과 프랑스는 상업 활동을 하는 동시에 개신교와 천주교를 국내에 침투시키고 있었다. 이에 대해 조선 정부는 아무런 강제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고, 목사와 신부들은 자유롭게 서울은 물론 전국 각지로 활동 범위를 넓혀 나갔다. 대부분의 민중들은 이들을 두려워하고 멀리하였다. 서울에서 어린 아이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자, 민중들 사이에는 미국 선교사들이 어린 아이들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널리 퍼진 적이 있었고, 1889년 경상도 함안에서는 천주교도들이 죽은 시체의 목을 잘라 피를 빨아먹는다는 소문이 퍼진 적도 있었는데, 이러한 소문을 통해 민중들의 인식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sup>21)</sup>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는 프랑스인들에게 민중들은 곳곳에서 욕설을 퍼붓거나 투석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때로는 이들을 습격하여 재물을 빼앗고 상처를 입히거나 죽이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조선정부가 그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함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의존함으로써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부류들이 생겨났고 신도 수는 증가하였다. 때문에 천주교도가 된 한국인들이 프랑스인들을 끼고 전답을 빼앗거나 사람들을 함부로 구타하는 등의 사건들이 일어났고 한국인 천주교도와 주민들의 충돌이 증가하였다.

개항 직후에는 일본을 포함한 외세의 압력이 주로 도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가해졌지만, 그 영향은 점차 농촌으로 확대되어 갔고, 이에 따라 농민투쟁도 점차 활발해진다. 임오군란 이후 1894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민란은 모두 38건에 이르는데, 특히 189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란이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광산에서의 폭동도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민란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갔으며, 대부분의 민란에서는 조세 수취구조 문란의 해결, 관리들의 부정부패 척결을 내걸고 나와 개항 이전과 별로 다른 점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권 탈취를 목표로 한 무장봉기적 민란도 발생하고 있었다.<sup>22)</sup> 민중들의 저항 가운데 외국인들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는 경우는 물론이지만

20) 김정기, 1989 <1890년 서울 상인의 철시동맹파업과 시위 투쟁> 《韓國史研究》 67 (한국사연구회)

21) 韓沽勣, <앞 논문>

22) 朴廣成, 1979 <高宗朝의 民亂研究> 《논문집》 14 (인천교육대학); 韓沽勣, 1971 《東學亂 起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국내 관리들에 대한 조세 저항으로 표현되는 각종 민란, 즉 직접적으로는 외세에 대한 저항을 드러내지는 않고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으로만 표현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은 대부분 외세의 침투와 밀접히 관련되면서 한말에 들어와 심화된 국가의 수탈에 대한 저항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개항 초기의 민중들의 국가권력과 외세에 대한 인식 정도와 대응을 정리해 본다면, 개항 초기 민중들은 외세의 침투에 대해 비록 막연한 감정어기는 했지만 두려운 감정과 적대감을 동시에 갖고 있었으며, 양자가 때에 따라 자주 엇갈리고 있었다. 그러나 임오 군란과 갑신정변을 거치면서, 그리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상행위와 포교 활동을 벌이는 외국인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접촉하게 되자, 민중들은 비교적 분명하게 그들의 실체를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들에 대한 다양한 대응을 보여주게 되었다.

민중들은 일본인·청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에게 강한 적대감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외세 침투를 허용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민씨 척족세력과 개화파 세력, 그리고 외국 상품의 침투와 곡물 수출 과정에서 막대한 중간이득을 취하는 특권 상인들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개화당을 ‘왜당’, 개화파 관료대신들을 ‘왜관료’·‘왜대신’이라고 부르면서 적대시하였다. 민중들은 기본적으로 민씨 척족정권과 개화파의 개혁노선이 자신들의 사회 개혁의 요구와는 대립할 수밖에 없으며, 외세의 침투를 무제한 허용하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sup>23)</sup>

민중들은 이렇듯 외세의 침투와 이를 끌어들이는 세력에 대해서 강한 적대감을 보이고 또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었지만, 아직 제국주의의 침투 논리와 침투 결과가 민중 자신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그들의 정치적 기대는 여전히 배외정책 노선을 걸던 대원군에게 기울어져 있었다. 물론 대원군은 민중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만한 수준에 있지 않았으며, 이러한 환상은 여러 차례의 변란을 거치고 나서야 서서히 무너지게 된다.<sup>24)</sup> 이 시기 외세 침투에 대한 저항의 논리와 근대 민족 국가 형성의 논리는 결코 매끄럽게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민중들은 구체적인 투쟁 과정에서 양 논리를 잇는 방향으로 근대 민족국가 수립을 통한 민족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쪽으로 움직여 가고 있었다.

23) 박은숙, 2005 《갑신정변연구》 (역사비평사) 제5부 민중의 인식과 갑신정변에 대한 입장.

24) 조성윤, 1985 <개항 직후 대원군과의 쿠데타 시도> [양상현 편, 《韓國近代政治史研究》 (사계절)]

## V. 동포 개념의 확산과 반일의식

최근 임진왜란과 관련된 심포지움<sup>25)</sup>에서 존 던킨은 《임진록》 등 조선 후기에 민간에 널리 읽혀졌던 책을 통해 민간전승에 나타난 민중의 민족의식을 분석한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다.<sup>26)</sup> 그는 이 논문에서 “서양 제국주의와 민족주의가 밀어닥치던 19세기 말, 20세기 초 한국인들의 집단적 ‘민족’ 의식 형성과정에 임진왜란에 대한 기억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였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는 “임진왜란에 대한 민간의 기억은 단지 ‘잊을 수 없는 이방인’인 일본인과 중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홉스봄(E. Hobsbawm)이 지적한 바 있는 ‘배타적 일체감’ 곧 조선 사람들은 이웃 나라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정치적·사회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자각을 불러일으키는 데에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sup>27)</sup>고 했는데, 여기서 홉스봄이 말한 ‘배타적 일체감’이란 이민족의 침입을 받았을 때 얻은 고통스러운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다,<sup>28)</sup> 말하자면 던킨은 임진왜란에 대한 역사적 기억이 민간전승을 통해 유지되어 왔고, 이것이 개항 직후 조선 사람들의 배타적 일체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개항기에 조선을 여행했던 일본인들도 임진왜란 당시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군의 피해를 입었고, 개항 당시의 조선인들도 다수는 임진왜란 당시에 죽은 사람의 후손이기 때문에 조선인들 사이에는 임진왜란의 참상에 대한 기억이 전승되어 왔고, 그것이 일본에 대한 깊은 원한으로 연결되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sup>29)</sup>

그렇다면 일본은 조선 민중들에게 부정적으로만 인식되었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 우선 임진왜란 때만 해도 민중들이 무조건 일본을 싫어한 것은 아니었다. 무능하고 부패한 조선 정부가 무너져 내리자 서울의 노비들은 왜병을 환영했으며, 倭兵과 합세하여 지방관을 살해하고, 근왕병을 모집하러 왔던 臨海君과 順和君을 납치하기도 하였다. 또한 향병들은 관군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독자적 행동을 하였으며,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토

25) 2006년 6월 경남 통영에서 열린 ‘임진왜란: 朝日전쟁에서 동아시아 삼국전쟁으로’라는 학술회의는 다음 책에 정리되어 있다. 정두희·이경순 엮음, 2007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26) 존 던킨, 2007 <임진왜란의 기억과 민족의식의 형성> (정두희·이경순 엮음, 《앞 책》)

27) 《위 책》 158

28) 《위 책》 155

29) 배향섭, 2001 <개항기의 대청의식과 그 변화: 민중계의 동향을 중심으로> 219

匪가 되었다.<sup>30)</sup> 이런 행동은 조선정부에 대한 적대감이 일본군에 대한 친밀감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 민중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외교관계가 복원되고 조선통신사가 왕래하면서 적대감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서서히 흐려져 갔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민중을 동원하여 조선왕조를 타도하려는 일부 저항 지식인들 가운데에서는 왜와 연결하여 거사를 기도하려는 자들이 적지 않았는데, 이 역시 일본에 대한 조선인들의 인식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sup>31)</sup>

예를 들면, 1813년 진주에서 성주 출신의 鄉班 백동원이 일본에 請兵하고 대마도와 연결하여 제주도를 공격해 점령하려는 변란을 기도하였고, 1817년에는 전주에서 채수영 등이 제주도로 들어가 대마도에 청병하여 거사하려던 사건이 있었다. 또 1836년에는 동래에서 서울 출신 班族 남응중이라는 자가 일본에 원병을 요청하여 변란을 기도하다 체포되었다.<sup>32)</sup> 이처럼 19세기 들어 발생한 민란 발생과 거사 계획에서는 일본에 대해 강한 반감을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일부에서는 현 조선 정부를 타도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희망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 특히 제주도를 점령하고, 대마도와 연계한다든지 하는 발상은 1898년 房星七이 주도했던 제주도 민란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sup>33)</sup>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조선시대 내내 민중의 정서 속에는 사실 일본에 대한 적대적 정서뿐만 아니라 일본군대, 또는 일본인에 대한 친근한 정서, 연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이러한 일본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인식, 정서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확대되어 가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1876년 일본에 의한 강제 개항과 그 이후 일본 공사관 설치, 일본 교관에 의한 별기군 훈련 등을 지켜본 서울 지역 민중들 사이에서는 반일적인 감정이 급속히 커져 갔으며, 그것이 임오군란 때 폭발한 것으로 생각된다.

던컨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한국의 개화론자들이 직면하였던 가장 큰 문제는 한반도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체성(일체감)을 만드는 작업보다 평민들에게 근대국가 건

30) 김강식, 1993 <임진왜란 의병활동과 성격> 《부대사학》 17 (부산대학교 사학회)

31) 배항섭, 1994 <개항기(1876~1894) 민중들의 일본에 대한 인식과 대응> 220

32) 이이화, 1984 <19세기 전기의 민란 연구> 《한국학보》 35, 71~76

33) 당시 방성철은 민란을 성공적으로 이끌자, 중앙 정부에 투항하기보다는 호적을 싸들고 일본 정부에 바치고 이를 통해 제주도의 자치를 보장받고 싶다는 생각을 드러낸 바 있다. 조성윤, 1986 <1898년 제주도 민란의 구조와 성격> 《한국 전통사회의 구조와 변동-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4 (문학과지성사) 209~236



설의 필요성을 불어넣어 주는 작업이 훨씬 더 어렵다는 점이었으며, 따라서 그들의 관심은 비양반층을 설득하여 자기들 주장에 동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양반 엘리트에게 개혁(서양화)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것이었다<sup>34)</sup>고 파악했다. 던컨이 말한 대로 근대국가를 구상하고 한국사회를 개혁하려 했던 개화파를 비롯한 당시의 지배층 사상가들이 서구 열강과 일본을 닮은 근대 국가를 건설하자는데는 동의하고 열심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민중의 삶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고, 민중과 거리가 먼 자신들만의, 자신들을 위한 국가 개혁을 구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개화파들이 가장 선망하고 열렬히 따르기를 원하는 모델이 이른바 ‘문명 국가 일본제국’이었다. 민중들의 눈에는 민중을 위한 개혁에 관심이 없고 축재에 골몰하는 보수 정치 세력도 한심했지만, 동시에 일본을 모델로 개화정책을 신봉하고 개혁사상을 추진하는 개화파도 민중을 멀리하기는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만약 개항 이후 일본이 조선을 침투해 들어오면서 조선 민중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마음을 샀다면, 민중들은 훨씬 더 일본에 유화적 친화적 태도를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시에 서울 지역 민중들에게서 그토록 반일의식이 강하게 표출했던 것은 그만큼 일본 세력을 받아들이고 손을 잡았던 민씨 척족 세력과 개화파가 민중들과는 거리가 먼 정치 구상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개항 이후 조선 민중의 서구인에 대한 대응은 그다지 적대적이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서구인의 시각에서 볼 때 ‘환영’하는 것으로 느낄 정도로 우호적이었다. 이런 대응은 일본인을 만나면 적개심을 보이고 죽이려 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이처럼 서구인에 대한 대응이 일본에 대한 입장과 확연하게 달랐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서구 세력이 조선에 진출할 때 의료와 봉사활동, 산업·기술의 보급같은 방법을 동원하여 접근해 들어옴으로써 침략자로서의 위험성을 줄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개항 초기 조선 사회에서 서울 민중들이 갖고 있던 의식은 어디까지나 백성의식이요, 평민의식이었고, 스스로를 하나의 민족으로 묶어 생각하는 것은 그리 강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민중들이 스스로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는 동포의식이 발전한 것은 그 이후였다. 조선 민중의 정서 속에는 일본에 대한 적대적 정서뿐만 아니라 일본 군대, 또는 일본인에 대한 친근한 정서, 연대하고자 하는 마음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이러한 일본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인식, 정서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확대되어 가는가 하는 점이다. 1876년 일본에 의한 강제 개항과 그 이후 일본공사

34) 존 던컨, 2007 《앞 책》 163

관 설치, 일본 교관에 의한 별기군 훈련 등을 지켜본 서울 지역 민중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생각, 즉 반일적인 감정이 급속히 커져 갔으며, 그것이 임오군란 때 폭발한 것으로 생각된다. 개항하면서 민씨 척족정권에 대한 실망과 반일의식이 급속히 높아지고, 그것이 임오군란으로 터져 나오고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개화파 세력을 공격하던 서울 주민들의 더욱 발달한 반일의식이 거꾸로 한국인 주민들 사이의 동포의식을 갖게 만들어 주었다고 본다.

## Ⅵ. 맺는말

개항 이후 조선 왕조는 급속히 밀려든 외세에 직면해서 종래의 중세국가체제를 유지하려는 움직임과 새로운 형태의 국가권력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이 서로 대립하고, 엮히면서 혼돈에 빠져들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민중들의 국가권력에 대한 인식은 물론, 외세, 특히 중국과 일본에 대한 인식과 반응 역시 계속해서 변화했다. 이 글에서는 개항 초기 서울 지역 민중들의 자기 인식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외세에 대한 인식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파악하려 하였다.

개항 초기, 특히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에서 나타난 서울 주민들의 태도는 분명히 민씨 척족 정권은 물론 개화파에 적대적이었다. 이렇게 민중들이 개항 초기부터 일제의 침략에 극히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낸 것은 멀리 왜구의 잦은 침략과 임진왜란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조선 민중들의 집단 트라우마 때문이었다. 이 집단 기억이 세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주민들에게 계승 전달되어 왔던 것이다. 민중은 체제를 공격할 때, 그리고 개화파를 공격할 때 언제나 일본과의 관련을 매개로 삼고 있었다. 지배층이 일본과 어떤 관련을 맺으려 했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가에 따라서 그들이 민중의 편에 서서 사회개혁을 하려는 세력인가 아닌가를 판단했다는 말이다. 당시 민중들의 체제 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은 별로 구체화되지 않고 막연했지만, 민중의 정치 구상은 대원군을 비롯한 체제 내의 혁신 세력에게 기대를 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며 민중의 의식을 한 차원 높인 것이 바로 동학사상이요, 그들이 중심이 된 1894년 농민전쟁이었다. 따라서 개항 초기 서울지역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근대적 국민의식은 농민전쟁 단계에 가면 전국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비평문]

하라다 다마키(原田環)

1. 본 논문은 1876년 개항 직후부터 1884년 갑신정변까지 시기에 반일 의식을 축으로 ‘臣民’과 ‘百姓’ 속에서 ‘民衆’이 형성되어 ‘國民’으로 자각하여 갔는가를 밝히려는 한 논문이라고 되어 있다(I. 머리말). 그렇지만 ‘民衆’에 대해서는 정의하고 있어도 ‘臣民’, ‘百姓’, ‘國民’에 대해서는 정의가 없어서 ‘國民’으로서의 자각화(국민의 형성)가 확실하지 않다.

2. 19세기 후반 조선의 대외문제와 관련하여 일본과의 관계를 ‘反日’(예를 들어, 임오군란, 갑신정변)적 측면에서만 탐구하고 있어 ‘學日’(일본을 근대화의 모델로 삼는 것. 예를 들자면 신사유람단)적 측면은 사상되어 있다. 당시의 조선에게 일본은 ‘反日’의 대상임과 동시에 ‘學日’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반일’과 ‘학일’을 같은 시야에 넣어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3. 청과의 관계가 과소평가되어 있다. 개국기 조선에서 청이 수행한 역할은 크다. 예를 들어 《朝鮮策略》, 조미수교통상조약, 조청수륙무역장정, 임오군란, 대원군의 保定 유폐, 갑신정변 등.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임오군란, 갑신정변을 對日 문제의 맥락에서만 취급하고 있다. 임오군란, 갑신정변은 청일 양국에 관계된 사건이어서 동아시아 전체를 속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4. 개화파(본 논문의 개화파에 대한 개념 규정에는 의문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더 언급하지 않겠다)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 필자가 말하는 “근대 민족국가 형성의 논리”(IV. 갑신정변과 그 이후의 변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주지하다시피 김옥균과 유길준 등의 개화파였다. 개화파를 배제하고서는 개항기 조선에서 “근대 민족국가 형성의 논리”의 구축을 밝힐 수 없지 않은가?

5. 민중이 “외세 침투에 대한 저항의 논리”와 “근대 민족 국가 형성의 논리”를 “구체적인 투쟁 과정”에서 결합시키는 방향에서 “근대 민족국가 수립을 통한 민족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쪽으로 움직여 가고 있었다”(IV. 갑신정변과 그 이후의 변화)라고 하는데, 실증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 [집필자 답변]

우선 본인의 논문에 관심을 갖고 비평해 주신 하라다 다마키 교수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라다 교수는 이 분야에 정통한 일본측 한국사 연구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논문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하 하라다 교수가 지적한 5가지 점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 1에 대하여

하라다 교수가 지적했듯이 본인은 이 글에서 ‘臣民’, ‘百姓’, ‘國民’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 그것은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이해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간략히 정리하자면 근대국가 형성이란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중세의 王政(Monarchy)에서 共和政(Republic)으로의 전환을 가리킨다. 그리고 ‘臣民’이란 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百姓’이란 서양이 아닌 조선사회에서 왕과 관리들을 제외한 일반 주민을 가리킨다. ‘國民’은 근대국가의 구성원을 가리키며, 민중은 피지배 세력 중에서 근대국가를 지향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집단적 주체를 가리킨다.

### 2에 대하여

하라다 교수의 지적대로 당시 조선에서는 ‘反日’과 ‘學日’의 경향이 동시에 존재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 글의 전개상 ‘學日’의 경향에 대한 분석까지 포괄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하라다 교수가 사용하는 ‘學日’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하자면, ‘學日’은 양반 지배세력에서 나타난 경향이고, 이것이 주로 개화파를 중심으로 형성되지만, 본인이 다루는 민중 세력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싶다.

### 3에 대하여

청과의 관계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반청의식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연구자가 다루었고(金正起교수), 본 논문의 논의 대상이 반일의식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다.

4에 대하여

하라다 교수가 지적한 개화파를 중심으로 한 지배세력의 근대로의 변혁 논리는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다.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글에서 집중하는 것은 민중 세력의 논리이다. 본인이 다룰 주제가 아니라서 제외했을 뿐이다.

5에 대하여

짧은 논문을 통해 본인의 생각을 충분히 제시한 것은 아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본인의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료를 보강하는 작업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상 간략하게 비평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였다. 비평의 많은 부분이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며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수정할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지적은 이 논문에서 소화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차후에 다른 논문을 통해서 별도로 토론해야 한다고 본다. 관심을 갖고 비평문을 보내주신 하라다 교수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